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1
----------	-----

발의연월일 : 2024. 6. 13.

발 의 자 : 문대림 · 전진숙 · 정진욱
정준호 · 김한규 · 박수현
복기왕 · 임호선 · 이병진
이건태 · 서삼석 · 이재관
박홍배 · 박희승 · 임미애
양부남 · 박균택 의원
(17인)

제안이유

농어업·농어촌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와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감소, 급격한 농어촌 인구감소 등으로 우리 농어업은 위기에 직면해있음. 특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어촌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농어촌을 소멸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등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

으나,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달라 전국의 농어민에게 충분한 소득안 전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실시된 다양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농어촌의 지속과 농어민 사회안전 망 구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대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여,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 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수당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함(안 제4조).

라.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민수당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바. 지방자치단체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사.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어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어민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자. 농어민수당은 매월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농어민수당 수급계좌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되, 압류·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

카. 농어민수당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타. 농어민수당 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25조).

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

하여 농어민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부담하도록 함 (안 제27조).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켜온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어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농어민수당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7.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농어민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수당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민의 책무)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농어민수당위원회의 구성 등) ①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민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어민 단체의 대표
4. 농어업 관련 기관의 대표
5.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어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민수당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
3. 농어민수당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민수당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농어민수당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련 부처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어민수당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어민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제12조(수당 수급권자의 범위) ① 농어민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

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나.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어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

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수급권자의 자격 및 수급권의 산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지급신청) ① 수급권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의 지급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보의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농어민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자등이 제1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을 각하

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당 지급의 결정 등)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농어민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한 후 시·도지사에게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조사와 농어민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어민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

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0조에 따라 농어민수당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농어민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당 수급계좌 및 압류금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어민수당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민수

당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민수당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농어민수당만이 농어민수당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에게 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와 농어민수당지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④ 수급자는 농어민수당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어민수당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9조(수당 지급 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수당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신청 직전연도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 직전연도 기준 해당 분야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직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4.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7.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급권의 상실) 농어민수당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21조(수당의 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수당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민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민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라 기본수당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농어민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농어민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농어민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농어민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권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신고) 농어민수당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농어민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농어민수당의 특례) 이 법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5조(이의신청) ① 제16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시효)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21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7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민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분담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